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34호 (2017-05)
발행일 2017. 5. 8.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¹⁾



임완섭
사회보장평가단 부연구위원

- 경제위기 발생 시 복지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은 경기 안정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공적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그 효과성이 확대됨.
-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다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지출 확대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
- 한국은 사회지출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령 부문과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커짐.

1. 들어가며

- 급격한 경기 변동을 동반한 경제적 충격은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과 여건을 단시간에 악화시켜 정부의 정책 개입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복지제도의 확충 및 관련 지출의 확대로 나타났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비슷한 시기에 경기 침체 상황에 빠뜨림.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국제 비교 평가가 가능함.
- 이 연구는 경제위기로 발생한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한 대응과 급격한 경기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자동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복지제도 및 복지지출의 역할을 국제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함.

1) 이 원고는 '임완섭 등(2016).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임.

-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포괄한 국가별 시계열 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약²⁾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 유형과 경제위기 기간을 충분히 포괄한 국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적이전 지출을 통한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로,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은 국민소득 계정상의 연쇄식을 이용한 복지지출과 국내총생산(GDP)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였음.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 유형별 복지지출의 변화

■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 주요 국가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분석함.³⁾

- (영미형) 아일랜드 · 영국, (북구형) 덴마크 ·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대륙형)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프랑스 · 독일, (남유럽형) 그리스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스페인, (한국) 한국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과 소비 수준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빈곤층이 증가하게 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율이 상승함(한국 16.4 → 17.2%, 영국 30.7 → 31.3%, 네덜란드 23.9 → 24.4%, 스페인 27.8 → 33.0%, 핀란드 30.0 → 31.6% 등. 2007년과 2009년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 OECD.stat).
- 당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분석 대상 국가 중 6개국(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09년에는 분석 대상인 모든 유럽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냄.

〈표 1〉유형별 GDP 성장률(2007~2009년)

(단위: %)

	영미형		대륙형					북구형				남유럽형				한국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2007	2.6	5.5	3.5	3.4	2.4	3.4	3.7	0.8	5.2	2.9	3.5	3.2	1.3	2.5	3.8	5.5
2008	-0.5	-2.2	1.2	0.7	0.2	0.8	1.7	-0.7	0.7	0.4	-0.7	-0.2	-1.1	0.2	1.1	2.8
2009	-4.2	-5.7	-3.6	-2.3	-2.9	-5.6	-3.8	-5.1	-8.3	-1.6	-5.1	-4.3	-5.5	-3.0	-3.6	0.7

자료: OECD.stat

- 소득이 하락하고 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면 사회보장제도는 자동 안정화 기능을 통해 복지지출을 늘려 소득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 증가를 막는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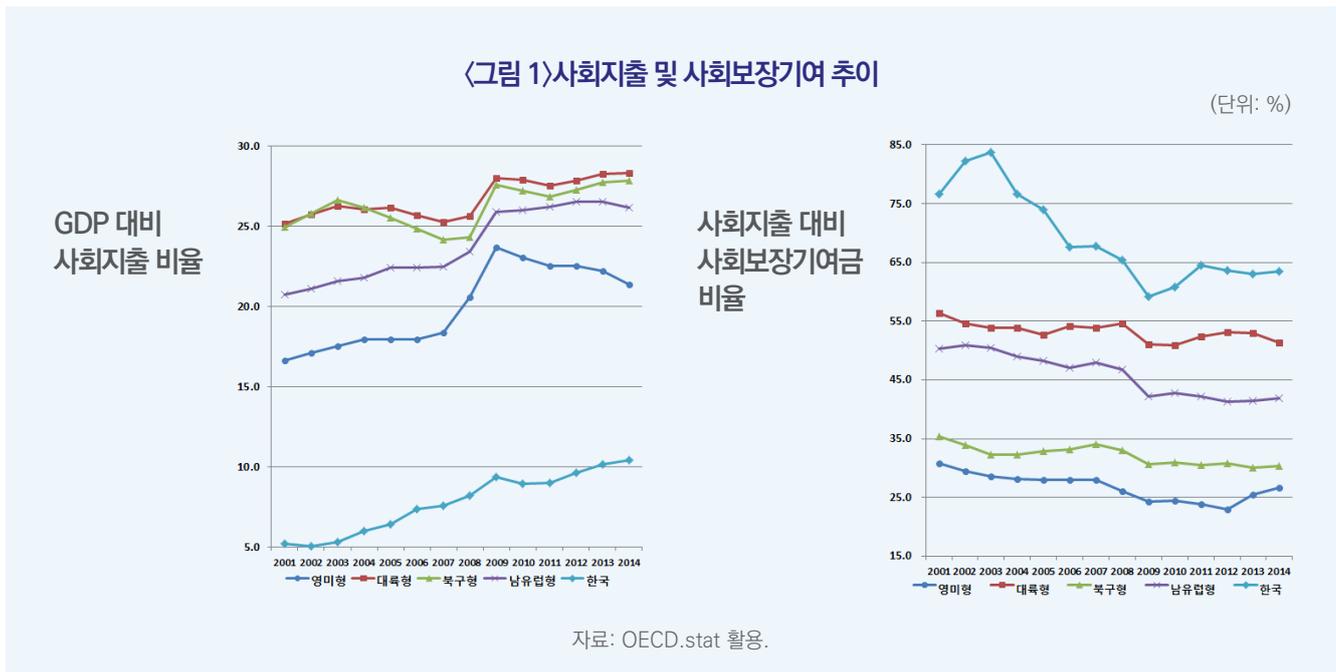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국가 유형별 복지지출⁴⁾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면,

2) 2016년 9월 기준 'OECD.stat'을 통해 입수 가능한 최신 소득분배지표의 시점은 2013년이었지만 지표 값이 수록된 국가는 분석대상 16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 대상 국가의 지표가 모두 제시된 기간이자 경제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08~2010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3) '유근춘 등(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선행연구의 유형화 작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함.

4) 여기서의 복지지출은 'OECD.stat'에서 제공하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중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을 의미함.

-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모든 유형에서 충격이 본격화된 2008년과 2009년에 급격히 상승.
 - 2010년 이후 영미형 국가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게 되지만 대륙형과 북구형 국가 그리고 한국은 다소간 등락하다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Bonoli(1997)의 국가 유형별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에 따라 고복지 국가 유형과 저복지 국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회보험 중심 국가와 비사회보험 중심(조세 중심) 재원 마련 국가로 구분함(유근춘 등, 2011, p.95 참조).
 -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대륙형과 북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복지 유형임.
 - 또한 대륙형과 남유럽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 기반의 사회보험 중심 국가이고 영미형과 북구형은 복지재원이 조세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국가임을 알 수 있음. 한편, 한국은 사회보험 중심 국가로 나타났지만 점차 사회보장기여금이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
- 한국은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과 총조세부담률⁵⁾이 가장 낮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유형임.
 - 대륙형과 북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지출 수준과 총조세부담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부담·고복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상대적으로 저부담·저복지인 영미형과 남유럽형 중에서 남유럽형이 영미형보다 총조세부담률이 높으면서 사회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총조세부담률(GDP 대비 총조세수입) 수준 및 추이

(단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미형	31.7	30.4	30.6	31.2	31.5	32.7	32.3	31.3	30.0	30.1	30.5	30.5	31.0	31.2
대륙형	40.1	39.6	39.3	39.2	39.4	39.4	39.3	39.7	39.2	39.2	39.7	40.4	41.1	42.3
북구형	44.5	44.1	43.8	44.1	44.8	44.3	43.8	42.9	42.8	42.8	43.0	43.3	43.7	44.1
남유럽형	34.1	34.2	34.0	33.5	34.2	34.6	35.3	34.2	33.2	34.0	34.8	35.6	36.4	36.8
한국	21.8	22.0	22.7	22.0	22.5	23.6	24.8	24.6	23.8	23.4	24.2	24.8	24.3	24.6

자료: OECD.stat

3.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

■ 국가(유형)별 소득 재분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소득빈곤율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음.

○ 빈곤율 및 불평등 감소 효과는 'OECD.stat'에 수록되어 있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산출된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음.

○ 빈곤율 감소 효과 =
$$\frac{(\text{시장소득 적용 빈곤율} - \text{경상소득 적용 빈곤율})}{\text{시장소득 적용 빈곤율}}$$

○ 불평등 감소 효과 = 시장소득 적용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적용 지니계수

- 조세와 공적이전을 포함하지 않은 시장소득과 달리 가처분소득은 국가의 정책 개입까지 모두 고려된 최종 단계의 집계(aggreated) 소득임.

■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한국과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친 2008~2010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살펴 보면, 한국은 빈곤율 감소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교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빈곤 감소 효과는 고부담·고복지에 속하는 대륙형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북구형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이전지출 및 조세를 모두 감안한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은 북구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북구형 국가는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도 다른 유형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로 측정하는 빈곤 감소 효과가 대륙형 국가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저부담·저복지 유형인 영미형 국가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남유럽형 국가보다 높지만 빈곤 감소 효과가 남유럽형 국가보다 커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⁶⁾ 비중은 남유럽형 국가가 25.9%로 영미형 국가의 23.7%보다 다소 높았지만 빈곤 감소 효과는 영미형 국가가 더 크게 나타남.

- 대륙형 및 북구형 국가의 사회지출 비중은 남유럽형보다 높지만 빈곤 감소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의 불평등 감소 효과는 2008년보다 2009년에 더 크며 가처분 적용 지니계수의 크기는 2008년과 2009년보다 2010년에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불평등 감소 효과는 저부담·저복지에 속하는 영미형이 가장 크고 남유럽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북구형은 불평등 감소 효과가 영미형과 대륙형보다 작지만, 이는 북구형의 시장소득 적용 지니계수가 다른 유형보다 낮기 때문임. 따라서 북구형 국가는 불평등 감소 효과가 다른 유형의 국가보다 작지만 가처분소득 적용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한국은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유럽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는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인 복지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 유형별 비교를 통해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정책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6) '3.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에서 제시된 사회지출은 'OECD.stat'에서 제공하는 중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을 의미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0년)의 소득분배지표와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

유형	구분	2008		2009		2010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영미형	빈곤율(%)	31.8	10.8	32.1	9.8	32.7	9.9
	지니계수	0.523	0.319	0.550	0.329	0.551	0.320
	사회지출/GDP(%)	20.6		23.7		23.1	
대륙형	빈곤율(%)	31.4	8.0	32.1	8.6	32.5	8.4
	지니계수	0.472	0.282	0.478	0.284	0.480	0.283
	사회지출/GDP(%)	25.6		28.0		27.9	
북구형	빈곤율(%)	25.8	7.8	27.2	7.7	27.3	7.7
	지니계수	0.428	0.254	0.437	0.253	0.441	0.259
	사회지출/GDP(%)	24.3		27.6		27.2	
남유럽형	빈곤율(%)	29.6	12.9	31.4	13.2	32.6	13.3
	지니계수	0.497	0.333	0.503	0.330	0.517	0.336
	사회지출/GDP(%)	23.4		25.9		26.0	
한국	빈곤율(%)	16.8	15.2	17.2	15.3	17.3	14.9
	지니계수	0.344	0.314	0.345	0.314	0.341	0.310
	사회지출/GDP(%)	8.2		9.4		9.0	

원자료: OECD.stat 활용.

주: *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적용(중위 50% 기준) 빈곤율이며 국가별 인구를 반영함.

** 지니계수와 GDP 대비 사회지출은 각 유형에 속한 국가별 산술평균을 적용함.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0년)의 국가 유형별 소득 재분배 효과



자료: OECD.stat 활용.

4. 경기 침체 완화 효과

■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 등의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 제도적 장치들이 재정지출이나 조세수입을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경기 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의미함.

○ 범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충격 발생 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에서는 복지제도의 확충과 관련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경기 안정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복지 선진국의 경우 경기 침체나 과열 시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잘 정비된 사회보장시스템이 관련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김원섭 등, 2010, pp.59-60).⁷⁾

-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었고 공적연금 수급률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사회지출 증가로 인한 안정화 효과의 확대가 예상됨.

○ 복지지출의 경기변동 안정화 효과는 다음과 같이 GDP와 총지출($C_i + G_i$) 사이의 연쇄식에서 도출한 식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음(Afonso & Furceri, 2008: 174-176).⁹⁾

$$\text{국민소득계정의 연쇄식: } GDP_i = \frac{GDP_i}{GNP_i} \frac{GNP_i}{NI_i} \frac{NI_i}{DNI_i} \frac{DNI_i}{(C_i + G_i)} (C_i + G_i)$$

● GNP: 총국민생산, NI: 국민순소득, DNI(가처분국민소득), C: 민간지출, G: 정부지출

- 복지지출의 안정화 효과¹⁰⁾: $\Delta \log DNI_{i,t} - \Delta \log (DNI + f)_{i,t} = \alpha^f + \beta^f \Delta \log GDP_{i,t} + \epsilon_{i,t}^f$

● f : 사회지출, β^f : 사회지출에 의해 완화되는 충격의 크기

- 'OECD.stat'의 자료를 활용, 한국 관련 자료 이용이 가능한 1990년 이후(1990~2014년)의 경기 안정화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복지지출에 해당하는 사회지출로는 OECD 35개국의 공공 및 의무(Public and mandatory private) 지출을 활용하였음.

■ 1990~2014년 한국의 사회지출 안정화 효과는 10.5%로, OECD 전체의 안정화 효과(14.2%)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1999년은 12.4%, 2000~2010년은 17.4%, 2011~2014년¹¹⁾은 20.5%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00년 이후(2000~2014년)의 안정화 효과도 1990년대의 안정화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경우(분석 대상 35개국) 1990~1999년보다 2000~2010년의 안정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2014년에는 2000~2010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7) 김원섭, 양재진, 이주하(2010).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적 대응. 정부학연구, 16(3): pp.57-89.

8) 통계청 e-나라지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4년 38.7%로, 2008년 대비 약 55% 증가함(2008년 25%).

9) Afonso & Furceri(2008). EMU enlargement, stabilization costs and insurance mechanism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7

10) 국민소득계정의 연쇄식에서 $\frac{DNI_i}{(C_i + G_i)}$ 를 $\frac{DNI_i}{(DNI+f)_i} \cdot \frac{(DNI+f)_i}{(C_i + G_i)}$ 로 대체하고 연쇄식에 로그를 취한 후 차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요소의 안정화 기능 추정식 중 사회지출의 안정화 기능 추정식을 활용함. 이는 GDP 변화율과 사회지출을 고려한 국민가처분소득 변화율 간의 관계를 나타냄.

11) 2011~2014년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 하였는데, 이는 짧은 시계열로 인한 분석 대상 부족에 기인한 것임. 2010~2014년으로 분석 기간을 1년 증가시킨 경우 계수값이 19.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음.

〈표 3〉 사회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 비교

	(1) 1990~1999년	(2) 2000~2010년	(3) 2011~2014년	(2) + (3) 2000~2014년	(1)+(2)+(3) 1990~2014년
한국 (OLS)	0.124 [7.48]***	0.174 [3.62]***	0.205 [0.86]	0.145 [3.26]***	0.105 [3.58]***
OECD (state fixed effects)	0.117 [2.15]**	0.163 [11.62]***	0.123 [4.07]***	0.150 [11.20]***	0.142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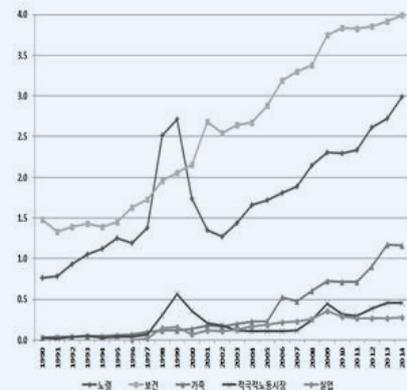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T-statistics(Robust standard errors 적용).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OECD.stat 활용.

-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를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1990~2014년의 경우 노령 부문 지출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5.7%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보건 부문(2%)과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1.4%) 순으로 나타남.
 - 1990~2014년을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령 부문의 안정화 효과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이후에도 경기 안정화 효과에서 노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보건 부문은 경기 완화 효과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기별로 살펴봤을 때 2000~2014년에는 그 영향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부문은 1990년대보다 2000년 이후에 안정화 효과가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과 실업 등 취업, 고용과 관련된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영역별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와 주요 영역별 사회지출 추이

〈표 4〉 한국의 경기 안정화 효과(OLS 적용)

	1990~1999년	2000~2014년	1990~2014년
노령	0.077 [7.50]***	0.084 [2.17]**	0.057 [2.36]**
유족	0.001 [1.72]	0.000 [0.16]	0.001 [1.25]
근로 무능력	0.003 [1.40]	0.000 [-0.10]	0.002 [1.08]
보건	0.022 [4.47]***	0.017 [0.97]	0.020 [3.13]***
가족	0.002 [5.77]***	0.017 [1.85]*	0.010 [1.92]*
적극적 노동시장	0.013 [1.94]*	0.032 [4.69]***	0.014 [1.80]*
실업	0.010 [5.37]	0.011 [2.30]**	0.010 [3.14]***
기타	0.001 [0.68]	-0.005 [-0.64]	0.000 [0.02]
전체	0.124 [7.48]***	0.145 [3.26]***	0.105 [3.58]***

〈그림3〉 한국의 주요 사회지출 추이(GDP 대비 %)



주: <표 4> 괄호 안은 T-statistics 임(Robust standard errors 적용),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OECD.stat 활용.

- 한국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 확대는 사회지출 영역별로 노령 부문과 가족 부문 그리고 고용 및 취업 관련 부문의 안정화 효과성 제고에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렇게 경기 변동의 충격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을 복지지출이 보다 긴 기간으로 나누어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부지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은 경기 변동의 일부분만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무조건적 증가가 경기 안정화를 담보하지는 못함.
 - 또한 지출 영역별로 해당 지출 규모가 크다고 안정화 효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령 부문의 지출은 보건 부문보다 적지만 안정화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00~2014년의 경우 보건 부문은 지출 규모가 훨씬 작은 가족 부문과 안정화 효과가 거의 비슷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은 안정화 효과가 보건 부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5. 정책적 함의

- 경기 침체 장기화와 저성장 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의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비가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시 복지제도와 지출은 경기 안정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는 2008~2010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빈곤율 감소 효과와 불평등 감소 효과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의 제고를 관찰할 수 있음.¹²⁾
 - 하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낮았는데, 이는 복지지출 수준과 복지제도의 성숙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가 복지지출의 규모와 무조건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북구형과 대륙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부담·저복지 유형에 속하는 영미형은 마찬가지로 저부담·저복지에 속하는 남유럽형에 비해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이 더 낮고 총조세부담률의 규모가 더 작음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성이 더 큼.
 - 따라서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복지지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킴.
 - 한국에서는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령 부문과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확대됨.
 - 하지만 사회지출이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부 영역별로 경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경기 침체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있음.
 -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의 충격을 보다 긴 기간으로 나누어 완화시키는 안정화 기능의 특성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경제위기 시 충격을 분산하면서도 위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함.

12) 한국의 소득 재분배 효과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빈곤 감소 효과	13.9%	14.5%	13.1%	15.5%	17.2%	16.9%	17.0%	18.0%	19.6%	25.8%
불평등 감소 효과	0.024	0.028	0.030	0.031	0.031	0.031	0.031	0.034	0.039	0.04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주: 통계청 자료의 시장소득과 본고에서의 시장소득은 정의가 다르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의 수치는 다르게 나타남.

임완섭 사회보장평가단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